

토 론 문

1세션 논평

김 원 식 연구위원
(국가안보전략연구원)

- 두 발표는 공히 신한반도체제 수립을 위해 성급한 통일 시도보다는 남과 북의 (국가성에 대한) 상호인정과 공존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함을 역설하고 있음
 - 오늘날 한반도 평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함
- 우리 사회 내부는 물론 외부로 향한 개방성을 위해, 나아가서는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도 배타적, 종족적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,
 - 역사적, 문화적, 언어적인 민족적 동질성과 분리해서 과연 남북관계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? 우리의 경우 과연 민족/국가가 분리가능한가?
- 성급한 흡수통일 논의에 반대하는 것과 ‘통일지향성’ 자체를 소거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봄
 - 양국양제/양국체제도 결국 통일을 목표로 나아가는 남과 북의 잠정적 평화체제, 공존체제를 의미하는 것인지? 아니면 어떤 최종 상태인 것인지?
 - 양국양제/양국체제는 결국 ‘1민족 1국가’ 형태의 통일(독일통일 사례)로 나아가는 긴 과정의 한 ‘국면’을 의미하는 것인지?

- 양국양제/양국체제론에서 말하는 양국체제가 남북관계에 대한 일종의 규제적 이념 혹은 규범적 이상인지 아니면 통일로 나아가는 잠정적 단계나 방편인 것인지?
- 지구화의 미래와 관련하여 탈민족주의, 국민국가 이후에 관한 논의들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지만,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국민/민족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임
- 과제는 기존의 국민/민족국가를 좀 더 개방적이고 평화 지향적으로 변형시켜나가는 것
- (우리가 반드시 피해야할 상황이지만)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남과 북이 각각 미중에 편승한다면, ‘양국양제/체제’는 최악의 경우 대리 갈등의 수행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?
- 남과 북이 그저 인접한 두 국가로만 서로를 인정한다면(?), 소극적 평화는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민족동질성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?
- 남과 북의 ‘상호인정’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라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함
-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 쌍방의 안보위협이 동등하게 상호인정 되고 협력을 통해 이를 축소시켜 나가야함
- 그러나 민주주의자로서의 우리가 ‘진정으로’ 북한의 수령 독재나 인권 탄압을 ‘인정’할 수 있는가?
-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 주도자가 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함
- 그러나 비핵화와 무관한 남북 양국체제 혹은 先평화체제, 後비핵화 주장은 현실성 부족(북한 핵보유 이전과 이후)
- 남과 북 쌍방의 상호인정과 협력을 통한 안보위협 해소 과정, 즉 ‘남북관계 발전-단계적 비핵화-북미관계 개선’의 ‘선순환 구조’가 필요함